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기본소득’ 관련 정책 I

헤드라인뉴스 기본소득제도 시범 실시 계획

사회·복지 ‘부분 기본소득’ 지원 시범사업 2022년 초 시행
예정

사회·복지

코로나19로 촉발된 기본소득 관련 논의와 법안
추진 계획

‘완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 시행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 논의 활성화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뉴욕	윤규근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암스테르담	장한빛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싱가포르	이은주	베를린	신희완
샌디에이고	김민희	뉴델리	박원빈		유진경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박효택		홍남명
시카고	강기향	자카르타	박재현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올랜도	박혜진	도쿄	이선인	하노이	이희재
워싱턴 D.C.	이정근	광저우	손지현	스톡홀름	허윤희
하와이	임지연	베이징	정민욱	바르셀로나	박정수
휴스턴	이경선	상하이	문혜정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충칭	모종혁	런던	이용훈
토론토	고한나	칭다오	강경이	로마	서동화
		나이로비	한 울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기본소득제도 시범 실시 계획

프랑스 파리지 / 사회·복지

파리시는 기본소득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올해 1월 서부 지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기본 수당제와 16~25세 청년 수당제를 발표.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실직했거나 학업 중이 아닌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매월 최대 약 500유로를 지급하는 청년 수당제를 2021년 5월 발표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배경

- 프랑스의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와 계획
 - 프랑스 기본소득제도 계획은 기존의 여러 사회복지제도와 맞물려 연구되었으며, 2017년 브노아 하몽 사회당 대표 후보의 제안으로 가시화됨
 - 브노아 하몽은 세금을 제외하고 월수입이 2,200유로 이하 가정에 600~800유로의 생존 기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
 - 2020년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기본 수당제(Revenu universel d'activité, RUA)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봉쇄령 등으로 실행되지 못함
 - 18~25세로 대상을 제한하거나 청년 수당제를 확대하는 방안,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사회주거지역 대상 주민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소득과 관계 없이 몇 개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
 - 기본 수당제는 기존의 장기 비소득자 정부 지원금(RSA)과 주거 보조금(API), 활동 수당제(la prime d'activité)를 재편하여 하나의 체제로 통합
 - 장애인 수당, 노인 수당, 25세 미만 청년 수당을 기본 수당제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
 -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인 안 이달고 파리시장뿐만 아니라 여당에 서도 선거공약으로 기본 수당제를 검토 중

주요 내용

- 2021년 파리지 기본소득제 시범사업 계획 발표
 -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올해 1월 서부 지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기본 수당제와 16~25세 청년 수당제를 발표

- 최소 소득보장제(Revenu minimum garanti) 혹은 기본소득제(Revenu universel)의 목적은 실직 혹은 학업 중단, 은퇴한 시민 등에게 이직 혹은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음
 - 파리지장 보좌관은 런던의 한 협회에서 13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실험과 2019년부터 인구 2만 3천 명 규모의 그랑 생프(Grande-Synthe) 지역에서 실시한 최소 사회보장제(minimum social garanti)를 예로 제시
- 파리는 최소 소득보장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2021년 하반기에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구체화할 예정으로 아직 계획 단계임
- 파리시 청년수당제 la Grantie Jeunes 시행
 - 학업 중이 아니고 일하지 않는 16~25세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1년간 매월 최대 497.50유로까지 지원
 - 부모의 지원이 없어야 하며, 최소 하나 이상의 인턴십 혹은 직업교육에 참여해야 함
 - 창업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취업 미팅 주선
- 프랑스 정부 차원의 청년 수당제 도입
 - 국회에서 청년 최소 수당에 대한 입법 제안
 - 2021년 2월 사회당 소속 의원들과 보리스 발로, 에르베 소리냐 의원이 청년 최소 수당제(minimum jeunesse) 도입을 제안
 - 이들은 현재의 장기 비소득자 정부 지원금(RSA) 제도가 25세 이상이 대상이라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18세 이상의 사회초년생에게 기본수당을 지원해야 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
 - 이들은 18세부터 매달 564유로의 기본소득과 5,000유로의 보조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 해당 위원회에서 거부
 - 2021년 5월 중순에 마크롱 대통령은 실직했거나 학업 중이 아닌 16~25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매월 최대 약 500유로까지 지급하는 청년 수당제를 발표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현 장기 비소득자 정부 지원금(RSA)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해당 연령대의 모든 청년층이 자동적으로 수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조건부 수당제 성격임

정책 평가

- 기본소득제가 빈곤가정의 구매력을 다소 높일 수는 있지만, 실제 경제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기본소득제가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라는 여론도 존재
- 시민단체들은 주거 보조금을 기본소득제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통합을 반대
- 파리市 기본소득제의 구체적인 실행내용은 아직 없음

<https://www.ladepeche.fr/2021/06/10/le-revenu-universel-gagne-du-terrain-9598785.php>

<https://www.lemonde.fr/revenu-universel/>

<https://www.cnews.fr/france/2021-01-17/la-ville-de-paris-va-tester-un-revenu-universel-1036650>

<https://www.novethic.fr/actualite/social/conditions-de-travail/isr-rse/paris-pourrait-bientot-experimenter-un-revenu-universel-148135.html>

<https://www.banquedesterritoires.fr/devant-les-incertitudes-sur-le-sort-du-rua-le-revenu-de-base-tente-un-retour>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rapports/cion-soc/l15b3488-tii_rapport-avis

<https://www.missionlocale.paris/jeunes/accompagnements/la-garantie-jeunes/>

김 나 래 통신원, kim.narae@kakao.com

‘부분 기본소득’ 지원 시범사업 2022년 초 시행 예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 사회·복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위탁양육 대상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더이상 주정부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foster care)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청년과 자격을 갖춘 임신부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1,000달러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부분 기본소득’ 지원법안을 통과시켜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매월 500~1,000달러를 총 24개월간 직접 지원하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

배경

- 미국에서는 18세기, 그리고 1960년대 닉슨 행정부 등에서 기본소득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최근 다시 기본소득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논의가 진행
-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검토
 -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도시에서 최근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 스톡턴, 로스앤젤레스, 오كل랜드, 산타클라라 카운티, 롱비치, 캄튼, 마린 카운티 등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
 - 스톡턴(Stockton)市에서는 기본소득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부채상환을 돕고, 재정적 안정을 찾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바 있음. 정책 수혜자(受惠者)들이 기본소득 지원을 받은 후 정규직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21년 7월 미국 최초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주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소득 보장 법안을 통과시킴
 - 새로운 법령을 통해 성인이 되어 더이상 주정부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foster care)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청년과 자격을 갖춘 임신 중인 여성을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
 -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 매월 500~1,000달러를 총 24개월간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
- 시범 프로그램은 2022년 초에 시행될 계획
- 이번 기본소득 지원정책은 저소득층을 비롯해 특정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형태로, 모두에게 지원되는 ‘완전 기본소득’과는 다른 ‘부분 기본소득’ 성격을 띠
- 기본소득 지원이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의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료품 지원(CalFresh), 의료보험, 기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 지원 기본소득을 소득 항목 면제사항으로 요청한 상태¹⁾
-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州정부의 사회복지부서에서 결정하며, 도시정부와 카운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범 프로그램 예산을 청구해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됨
- 총 5년 동안 州정부의 일반기금 항목에서 3,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됨

정책의 의의 및 한계

- 이번 정책 도입을 통해 다른 州정부의 유사 법안 및 계획을 유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연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동안 식품 바우처(voucher)나 주거 지원과 같은 제한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수혜자의 지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데 차이가 있음
- 그러나 빈곤층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고, 구직활동에 대한 의지를 낮추며, 빈곤에 대한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수혜자의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등의 한계도 존재
 - 따라서 노동의 가치를 장려하는 정책을 더욱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본소득 지원은 직업훈련이나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음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guaranteed-income-exemption-requests>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guaranteed-basic-income-projects>

<https://www.abc10.com/article/news/politics/california-approves-state-funded-universal-basic-income-plan/103-74d297d0-14aa-4ce1-9643-beea403c8208>

<https://www.abc10.com/article/news/local/california/californias-basic-income-need-to-know/103-21f50629-49d8-4446-b78a-0f79da79d365>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1) 출처: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guaranteed-income-exemption-requests>

코로나19로 촉발된 기본소득 관련 논의와 법안 추진 계획

캐나다 / 사회·복지

1974년과 2017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프로그램을 통해 실직자를 대상으로 주당 500달러를 지원한 것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2021년 9월 조기 총선에서 재집권한 자유당이 진보 성향의 신민주당과 연합하여 기본소득 법안을 상정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계획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기본소득 지원 사례

- 캐나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대량 해고로 인해 2020년 3월 15일부로 한시적인 프로그램인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실시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및 지원 내용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소득이 5,000달러 이상인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 5,000달러 이상으로 하한선을 둔 이유는 소득이 원래 없었던 학생,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임. 소득 상한선은 별도로 두지 않았음
 - 16주 동안 시행되는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주당 500달러를 지원
 -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자발적인 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
 - 긴급 지원이므로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사후 감사 작업을 거쳐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함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과 시범사업 시행 사례

- 2019년 캐나다 소득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약 370만 명을 극빈층으로 추산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음식, 의복, 교통비, 주거지 등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충분한 소득이 없는 국민을 극빈층으로 정의
- 매니토바주의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 시범사업
 - 캐나다 중부 내륙 매니토바주는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농촌 마을인 더핀(Dauphin)

- 지역 사회에서 민컴(Mincome, Minimum Income)이라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
 - 소득 보조가 저소득층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되거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
 - 이 프로젝트 시행 결과, 병원 입원율이 낮아지고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얻음
 - 우려할 만한 근로 의욕 저하는 발견되지 않았음. 단, 10대 청소년층에서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
-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과 중단
 - 온타리오주는 2017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를 약 4,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 3년 동안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州정부 선거 후 집권당이 바뀌면서 예산 문제를 이유로 2018년에 중단
 - 사업 취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참가자와 참가 대학인 라이어슨(Ryerson)대학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 ‘남부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경험(Southern Ontario’s Basic Income Experience)’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술
 - 75%의 참가자가 기본소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함
 - 80%의 참가자가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아졌다고 함
 - 50%는 흡연량이 줄었고, 48%는 음주량이 줄었다고 함
 - 83%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81%는 자신감이 증가했다고 함
 - 66%는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함
-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국적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Ipsos)가 실시한 2017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본 소득에 대해 44%가 찬성하고 31%가 반대하였으며 24%는 유보적인 입장
 - 또 다른 설문조사 기관인 캐나다의 앵거스 레이드(Angus Reid)의 2020년 6월 조사에 따르면, 59%가 기본소득에 찬성하고 30%는 반대하며 11%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나타남
 - 입소스(Ipsos)가 실시한 2021년 4월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 국민의 57%가 기본 소득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일시적인 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캐나다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음
 - 기본소득 수급자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려
 - 캐나다인의 52%는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최대한 빨리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나머지 48%는 이에 반대

‘완전 기본소득’과 ‘부분 기본소득’의 개념

- 캐나다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
 -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빈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
 - 보장 기본소득(Guaranteed Basic Income)은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과 같은 긴급 지원 시스템이며, 이는 조건부로 저소득층에게만 지급
- 캐나다에서는 이 두 가지 기본소득 개념을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음

기본소득 관련 최근 입법 동향

- 2020년 8월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의 하원 의원 레아 가잔(Leah Gazan)이 최초로 기본소득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됨
- 2021년 2월 집권당인 자유당(Liberal Party)의 하원 의원 줄리아 제로이츠(Julie Dzerowicz)가 기본소득 보장 법안인 Bill C-273을 발의
 - 이 법안은 기본소득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기본소득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제시
 - 또한 캐나다 전역에서 기본소득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한 국가 표준의 초안을 제안
 - 9월 조기 총선으로 인해 의회가 해산되면서 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자유당의 재집권으로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자리 창출 방안, 국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의 입장

- 2021년 조기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유당은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공약은 내세우지 않았음
- 반면 신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공식화하였고, 고소득층의 소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여 집권 가능성이 큰 자유당을 압박
- 캐나다는 1966년 중도 성향의 자유당 정부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진보정당인 신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무상의료의 근간이 되는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을 제정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도 비슷한 방식을 통해 법안 논의와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프로그램의 연장과 예산 증액에 대한 신민주당의 압박으로 자유당이 프로그램 연장과 증액을 승인한 바 있음
 - 재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은 신민주당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
- 참고로, 캐나다 의회 예산담당관(Parliamentary Budget Officer)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온타리오주와 유사한 국가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2021~2022년 기준 약 850억 달러가 소요되고, 빈곤율은 거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

<https://www.rcinet.ca/en/2020/06/18/survey-shows-canadian-interest-in-a-universal-basic-income/>

<https://angusreid.org/universal-basic-income-covid19/>

<https://globalnews.ca/news/3509763/what-do-canadians-think-of-basic-income-it-will-reduce-poverty-but-could-raise-taxes/>

<https://www.ipsos.com/en-ca/eight-ten-canadians-82-4-say-win-their-vote-election-time-parties-must-aim-balanced-budget-rising>

<https://www.ubiworks.ca/basicincomebill>

<https://labourstudies.mcmaster.ca/documents/southern-ontarios-basic-income-experience.pdf>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완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 시행

스페인 카탈루냐 / 사회·복지

스페인 카탈루냐에서는 2021년 2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州정부가 ‘완전 기본소득’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일환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 이를 위해 州정부 산하에 시범 프로젝트 담당 사무소를 개설

14ª Semana Internacional por la Renta Básica Incondicional

La Renta Básica Incondicional (RBI) es una necesidad urgente

eventos de la semana

september 2021

20 21

Preguntas y respuestas sobre la renta básica incondicional

Taller de Trabajo on-line

Jueves 23 sept 19:00 GMT+2

ID de reunión: 897 7412 9195
Código de acceso: 298115

Cantaremos entre todas "Canto a la libertad" de Labordeta

Acude a la

Marcha Internacional por la RBI

Sábado 25/09/2021 - 19 hs.

Plaza del Callao

ZOOM INTERNATIONAL BASIC INCOME MARCH #2

25 september 2021
Virtual everywhere!

ZOOM SESSIONS 24/7 IN EVERY TIMEZONE ON EARTH!

#zibim
#basicincomemarch
#onlineincomemarch

www.basicincomeweek.org

¡Toda la semana!

[그림] 2021년 9월 20일~26일 제14회 ‘국제 완전 기본소득 보장의 주’를 맞아 유럽 각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행사 (출처: EUREKA)

배경

- 유럽연합 내 모든 시민들의 ‘완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등장
- 유럽연합 내 모든 시민들의 ‘완전 기본소득’ 보장을 요청하는 이니셔티브가 2020년 5월 15일 등장

-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유럽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격차를 줄이고, 2017년 유럽연합 공동선언의 ‘유럽연합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평등한 사회 보호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임
- 이 이니셔티브에서 주장하는 ‘완전 기본소득’은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충분한 금액의 4가지 기준으로 정의되며, 이는 유럽연합 조약에 언급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및 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치
- 스페인 내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 동향
 - ‘완전 기본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사회단체인 기본소득 네트워크(Red Renta Basica)는 2020년 5월 12일~13일 스페인 각 지역의 주민 2,168명을 대상으로 ‘완전 기본소득’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대는 균등한 분포를 보였으나, 고용 상태를 보면 취업 인구가 75%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안달루시아, 카탈루냐, 마드리드 주민 순으로 참여
 - 조사 결과, 과반수(56%)가 기본소득 정책에 찬성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8~24세 젊은 층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별로 보면 찬성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반대 비율은 남성이 34%로 여성의 26%보다 조금 높음
 -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계층은 저소득층 및 실업자
 - 기본소득 정책 시행기간을 보면, 영구 시행(31%)보다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의 일시적 시행(38%)을 좀 더 선호
 - 기본소득 정책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변화를 보면, 취업 계층과 실업자 모두 큰 변화 없이 노동 및 구직 활동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큰 변화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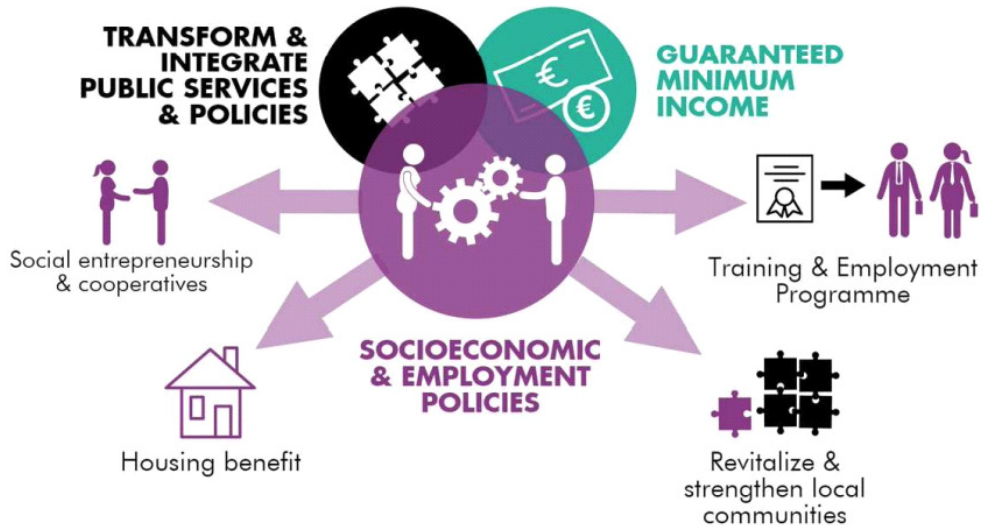
카탈루냐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 및 선거 이후 ‘완전 기본소득’ 정책 추진

- 2021년 2월 실시된 카탈루냐 정부 선거에서 ‘완전 기본소득’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 각 정당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 및 공약을 발표
 - 카탈루냐 사회당(연방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완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음
 - 연금, 실업 수당, ‘부분 기본소득’, 최소(최저) 생활소득이 사회적 통합과 충분한 가구소득 보장을 위한 긴급 지원 및 부문별 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
 - 인민통합후보자(카탈루냐 독립주의,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및 좌익대중주의 정당)는 ‘완전 기본소득’에 찬성

- 전체 인구 평균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소득으로 보장하는 ‘완전 기본소득’ 시행 및 이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카탈루냐를 위해 함께(카탈루냐 민족주의 및 공화주의 정당)는 기존 ‘부분 기본소득’과 최소 생활소득 제도 개선 및 ‘완전 기본소득’ 관련 논의에 찬성
 - 단기적으로는 최소 생활소득과 같은 다른 지원책과의 조정을 통해 ‘부분 기본소득’ 정책 개선
- 카탈루냐 공화좌파당(카탈루냐 독립주의, 공화주의, 민주사회주의 및 좌익민족주의 정당)은 기존의 ‘부분 기본소득’과 최소 생활소득 제도 개선 및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찬성
 - 현재는 카탈루냐주 재정에 여유가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최소 생활소득 관리정책과 함께 ‘부분 기본소득’ 정책을 개선. 장기적으로는 ‘완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모델로 전환
- 카탈루냐 포데모스 통합당(카탈루냐 자치주의, 좌익대중주의 및 민주사회주의 정당)은 기존의 ‘부분 기본소득’과 최소 생활소득 제도를 개선하고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찬성
 - 이를 위해 카탈루냐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 필요
- 지방선거 이후 카탈루냐 독립에 찬성하는 3개 당(카탈루냐를 위해 함께, 카탈루냐 공화좌파당, 인민통합후보자)으로 새롭게 구성된 카탈루냐주 연합정부는 ‘완전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 ‘완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실시
 - 2021년: 일부 계층 혹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완전 기본소득’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수행
 - 2022년: 가장 취약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최선의 ‘완전 기본소득’ 및 사회소득 시범 정책 적용
 - 2023년: ‘완전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 정책 적용 대상 확대방안 제시
 - 주정부 산하에 ‘완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 담당 사무소 개설
 - ‘완전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의 중심은 ‘무조건성’임. 이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조금 수령인’이라는 낙인을 방지
 - 또한 ‘무조건성’은 보조금 액수와 비슷한 임금의 일자리를 찾지 않게 되는 ‘빈곤의 함정’을 예방

바르셀로나市의 기본소득 시범 정책 B-Mincome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2017년부터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는 ‘완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인 B-Mincome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지속 시행



[그림] 바르셀로나 기본소득 시범 정책 B-Mincome 계획

(출처: 바르셀로나 시청)

- B-Mincome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의 베소스강 근교 10개 지역의 취약계층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참여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해 수동적인 공공정책(재정 지원)과 적극적인 사회노동정책(훈련 및 고용, 사회적 경제, 임대 촉진, 커뮤니티 네트워크 참여)을 조합하여 적용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빈곤 감소 및 개인의 자율성 증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득 이전 방식의 검증임
- 총 1,000여 가구에 수동적 공공정책을 적용하고, 적용 방식에 따라 조건성, 무조건성, 제한성, 무제한성의 4가지 그룹으로 분류
 - 조건성과 무조건성은 적극적인 사회노동정책에 대한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제한성과 무제한성은 지원금 이외의 추가소득에 따른 지원금 액수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
- 370가구에 대해서는 ‘완전 기본소득’을 적용
- B-Mincome 정책에서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사용

- 정책 시행 결과, 주민 복지 개선과 우울증/불안 등 정신질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전반적인 복지 11% 증가 및 경제적 복지 1.4% 증가
 - 심각한 물질적 결핍률 8% 감소 및 식량 부족에 대한 걱정 18% 감소
 - 본업 이외의 수단(임대 등)을 통한 수입의 필요성 3% 감소
 -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에 따른 정신질환 발병 감소와 수면의 질 향상
 -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8% 증가
 - 커뮤니티 단위의 정책 적용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
- 이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의 특정 지역에서 설계 및 구현되었으므로 바르셀로나市 전체, 카탈루냐州 전체, 스페인 전체 또는 다른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가설을 비교/대조하기 위한 참고 사례로 활용 가능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관련 플랫폼 EUREKA,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rentabasicaincondicional.eu/>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소개 및 서명, 유럽연합, 2020년 5월 15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europa.eu/citizens-initiative/initiatives/details/2020/000003_es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와 완전 기본소득, El salto diario, 2021년 9월 25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elsaltodiario.com/renta-basica/iniciativa-ciudadana-europea-convencer-firmas-renta-basica-universal>

기본소득 네트워크, 2001년,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redrentabasica.org/rb/>

기본소득 관련 스페인 내 설문조사, 2020년 5월 21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redrentabasica.org/rb/nueva-encuesta-sobre-la-renta-basica-en-espana/>

2021년 2월 14일 카탈루냐 지방선거의 '완전 기본소득' 관련 각 정당의 입장, Sinpermiso, 2021년 2월 14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sinpermiso.info/textos/los-partidos-catalanes-responden-a-la-pregunta-sobre-la-renta-basica>

새로 구성된 카탈루냐 주정부의 주요 정책, Europa press, 2021년 3월 23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europapress.es/catalunya/noticia-cup-erc-estudian-implementar-banca-publica-renta-basica-universal-mandato-20210323080809.html>

카탈루냐 주정부 시범정책 사무소 개설, Elperiodico, 2021년 10월 9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elperiodico.com/es/sociedad/20211007/generalitat-crea-oficina-plan-piloto-12164671>

바르셀로나시 기본소득 정책 소개, 바르셀로나 시청,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ajuntament.barcelona.cat/dretsidiversitat/es/noticia/por-una-renta-basica-universal-que-garantice-derechos_997326

B-Mincome 정책 소개, 바르셀로나 시청,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ajuntament.barcelona.cat/bmincome/ca>

B-Mincome 정책 결과 분석, 바르셀로나 시청, 2021년 2월,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ivalua.cat/sites/default/files/2021-02/informe-integracion-resultados-bmincome-es.pdf>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 논의 활성화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빈곤 문제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시적이고 일부 계층을 배제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 이에 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공론화하며 정책 도입 가능성을 논의

배경

- 코로나19의 여파로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행된 봉쇄령으로 빈곤문제 심화
 -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수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계와 민간에서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
 - 정부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

민간 부문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 이유

-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재정자문사 Sage 3는 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공정 선거 촉진
 - 국민들의 기초 생계를 지원하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남발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 이를 통해 부정부패, 권력 남용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 2023년 예정된 말레이시아 15대 총선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여성 권리 신장
 - 기본소득 제도는 성별 소득 격차를 완화해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기여
 -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여성과 자녀는 기본소득 실현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
 -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장
 - 기본소득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근로시간 단축 및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 재정적/심리적 안정을 제공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 사고 등 위험요인 방지
- 재정 건전성에 기여
 - 기본소득 도입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예산 및 지원금을 줄여 재정 건전성에 기여
- 노인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기여
 - 말레이시아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근로자 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¹⁾에 따르면 근로자의 67%는 월 1,000링깃 이하의 연금을 수령
 -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

정당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

- 2020년 7월에 열린 국회에서 누를 이자 의원은 인적자원부에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제안
- 2020년 8월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의 모하마드 하산 부의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 국가지원금인 BPN(Bantuan Prihatin Nasional)²⁾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
 - 저소득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명 중 1명이 실직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 또한, 2020년 6월 가구당 중위소득이 1,000링깃으로 빈곤층 소득금액 기준인 2,208링깃의 절반 이하로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 제기
- 말레이시아 사회당(PSM)의 마이클 제야쿠마 의장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
 - 마이클 제야쿠마 의장은 기본생계 유지를 위해 1,000링깃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 기본소득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
- 민주정의당(DAP)의 찰스 산티아고 의원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 표명
 - 찰스 산티아고 의원은 기본소득제는 코로나19와 봉쇄령에 따른 빈곤의 심화와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주장
 - 따라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

1)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근로자는 월 급여의 최소 11% 이상, 고용주는 최소 12% 이상을 납부. 60세가 되면 은퇴연금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단과 계층을 지원하고자 2021년 7월 12일부터 수령 가능한 나이 제한을 55세 이하로 변경

2)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정책으로 2020년 100억 링깃을 할당해 가계소득 월 8,000링깃 이하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학계의 입장

- 말레이시아 우타라 대학교 금융업학과 순잔잔 교수는 경기부양책 제도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현재 시행 중인 경기부양책 제도의 한계 지적
 - 말레이시아 정부는 1차 경기부양책(PRIHATIN), 3차 경기부양책(PENJANA), 2021 예산안 등 기본소득 제도와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
 -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한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12th Malaysia Plan)’

-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2021~2025) 수립
 -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1년 9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주요 목표로 한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2021~2025) 발표
 - 뉴스트레이츠타임즈 등 현지 언론은 국민 복지 증진을 강조한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 수립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도입 실험이 가능해졌다고 보도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에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SDG Summit)에서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에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하겠다고 발표
 -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재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정책 도입 여부를 논의 중

Operationalising the Twelfth Malaysia Plan, 202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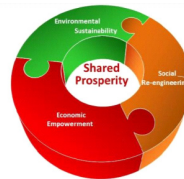
Social Re-engineering

Social capital

- Social enterprises
- Affordable housing
- Healthy and active lifestyle
- Invigorate healthcare
- Ageing Society
-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all
- Structure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students
- Regulating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in TVET
- Job creation for local
- Managing foreign workers
- Work-life balance

Inclusivity

- Cost of living and purchasing power
- Diversify sources of income
- Towards smart farming/ precision agriculture
- **Universal basic income**
- Greater income equality with focus on B40 and M40
- Improve poverty measurement
- Urban poverty
- Independent Bumiputera
- Optimising Malay reserve land
- **Minority groups participation (Orang Asli, Bumiputera Sarawak, Anak Negeri Sabah, Low Income Indian and Kampung Baru Cina)**



Social cohesion

- National unity and cohesion
- **Community development (including person with disabilities)**
- Good ethics and moral values
- Access to education services
- Secure nation

"Inclusive development with emphasis on growth with equity provides equitable opportunities for all to participate and benefit from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rrespective of gender, ethnicity, socioeconomic status and geographical location to achieve a developed and inclusive nation"

Source: MEA, 11MP

[그림] 2019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SDG Summit)에서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에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하겠다고 발표 (출처: Penyediaan Rancangan Malaysia Kedua Belas, 2021-2025)

의미 및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봉쇄령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여론 형성
 -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 등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의 혜택을 경험하면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이 증가
 - 정부 차원에서도 기본소득을 포함하는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을 마련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층 활발해진 것으로 평가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my-say-universal-basic-income-and-critical-adjustment-our-road-nationhood%C2%A0>

<https://www.newmandala.org/poverty-policy-making-during-the-pandemic/><https://www.nst.com.my/opinion/columnists/2021/06/700143/12th-malaysia-plan-should-be-tabled-soon-possible>

https://www.bernama.com/en/business/news_penjana.php?id=1905050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0/08/29/dap-psm-leaders-back-universal-income-plan-by-umno-tok-mat/>

<https://focusmalaysia.my/universal-basic-income-covid-19-has-shown-the-poor-need-such-a-scheme/>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13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11월 22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